

충남·경기 상생발전 국가 차원에서 추진돼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도시계획학 박사

민선지방자치제의 확대 실시이후 지역간 경쟁과 갈등의 증대와 함께 지역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을 위한 강원·충북·경북간의 협력, 동해안 권 개발을 위한 강원·경북·울산 간 협력과 남해안 권 개발을 위한 전남·경남 및 부산간 협력이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 시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지역의 상생발전 노력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지역 리더십의 특별한 정치적 위상과 영향에도 원인이 있으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두 지역 상생발전이 미치는 영향이 지역발전 차원을 넘어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 차원의 광범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세계화시대에 충남과 경기도의 상생발전은 향후 국가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지역이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파워하우스"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두 지역 상생발전은 지역문제의 해결 보다는 미래의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충남-경기지역에는 첨단 지식기반 산업인 컴퓨터 산업의 76.8%, 반도체의 77.9%가 집중돼 있고, 수출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가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국내 산업의 비교우위성에 의존한 지역발전만을 촉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두 지역의 상생발전은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지닌 산업 및 물류기반을 형성하여 국가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과 갈등구조를 타파하고 상호보완의 공동번영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은 한정된 국가자원의 배분논리 속에서 비생산적인 경합과 갈등관계에 머물러 왔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구조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내부적 발전역량을 키우는 데 장애요인이 돼 왔다. 그동안 수도권은 국내의 상대적 입지 우위성에만 집착하여 무분별한 양적 팽창과 혼잡을 가져왔고, 지방은 자생력을 상실한 채 외부의존적인 침체된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지역의 상생발전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비생산적인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공동번영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두 지역 상생발전이 분권시대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경제-사회발전의 성공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지역발전은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거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역자율의 분권시대에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원 여부가 지역발전의 핵심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고유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분권과 권한이양이 선행되어야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스스로의 자각과 선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충남과 경기도는 이미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 공동의 해외투자유치와 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중심의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분권시대에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역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라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막대한 재정과 전략수립, 기술과 경영 등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노하우를 지닌 조직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두 지역의 상생발전 노력에서는 지역의 선도와 자율 못지않게 중앙정부와 협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분권시대의 지역과 국가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그동안의 명령과 통제 수직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두 지역의 상생발전은 지역차원에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기반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분권시대의 지역중심 국가발전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